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자금지원

부품·소재산업 등 최근 설비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자금 투입이 본격 개시된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 육성 부문에 300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31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757억원이 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남대문 시장을 첨단 수출기지화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구축자금으로 215억원을 집중 투입, 유통부문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산업기반기금은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산자부에 설치된 기금으로, 대출조건은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원칙으로 지원되며, 소요재원은 대출 원리금 조기회수분 등으로 충당된다.

산업기반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별 취급기관에 신청을 하면 마감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심사,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기금을 대출받게 된다.

〈 2000년도 산업기반기금 융자 신청기관 〉

기 관 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담 당 분 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369-7821, 24, 25 (금융지원팀) 369-7855, 11 (환경산업팀)	www.koami.or.kr nskim@koami.or.kr skkang@koami.or.kr	산업구조고도화 중 부품·소재산업 육성 산업구조고도화 중 신기술 보급 중 자본재, GR마크 산업구조고도화 중 지역산업 균형 발전중 경남기계 지식기반산업발전 중 지식기반제조업 발전중 메카트로닉스, 정밀광학기타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783-1711	www.koreamold.com kodmic@unitel.or.kr	산업구조고도화 중 교부가 가치화 중 금형
한국표준협회	369-8111	www.ksa.or.kr ksapup@chollian.net	산업구조고도화 중 교부가 가치화 중 전자제품준화
한국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	579-3291 (64)	www.eask.or.kr eask@chollian.net	산업구조고도화 중 교부가 가치화 중 소형가전기기
한국조명기술연구소	3141-6797	www.kilt.re.kr noma74@chollian.net	산업구조고도화 중 교부가 가치화 중 조명기기

기 관 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담당 분야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711-0989	www.tool.or.kr toolmaster@tool.or.kr	산업구조화 중 고부가 가치화 중 공구
한국광학기기협회	581-2321	koma94@unitel.co.kr	산업구조고도화 중 고부가 가치화 중 광학기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586-2072/4	kasto@chollian.net	산업구조고도화 중 고부가 가치화 중 계량·측정기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53-0941 (교 383)	www.eiak.org web911@lycos.co.kr	산업구조고도화 중 신기술 보급 중 전자
한국전기공업진흥회	3476-0271/4	www.koema.or.kr	산업구조고도화 중 신기술 보급 중 전기
한국전자거래 (CALS/EC)협회	551-1457	www.kcals.or.kr ichan@kcals.or.kr	산업구조고도화 중 산업정보화 기반 구축
대한상공회의소	316-3114, 3423 3458-60	www.kcci.or.kr jsleer@kcci.or.kr stonek@kcci.or.kr	지식기반산업발전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발전 중 기업지원 서비스 유통 합리화

산업자원부, 조명산업 적극 육성

산업자원부가 침체기에 접어든 조명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영세업체의 난립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명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한국조명기술연구소내에 포털사이트인 '사이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조명업체간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등 조명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출연금 8억원 중 1억원을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해 출연, 150개 업체의 조명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참여

업체 확산을 위해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2억원 늘어난 8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구소가 KS, 조명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고효율 기자재, 고마크·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조합과 업계·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조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개정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략물자를 외국의 고정거래처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략물자 통관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개정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고정거래처에 수출할 경우 특정포괄 수출허가의 허가요건을 최근 동일 거래처에 대한 1년간 전략물자 수출건수가 6건 이상에서 최근 2년간의 전략물자·수출건수가 3건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업체의 자율적인 통제에 의한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수출허가 신청에 따른 수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

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매 건별로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 등의 수출입통제 기준도 상당폭 완화됐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 복합이론성능(CTP)이 20Mtops 이상에서 3500Mtops 이상으로, 고성능컴퓨터는 2000Mtops 이상에서 6500Mtops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고성능 컴퓨터를 수입하는데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과 경비가 상당폭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통관증명서 발급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 PQ·적격심사 기준 개정

조달청은 정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따른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이 새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의 경우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평가기준을 완화해 공사실적 평가를 삭제하고 경영상태 평가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으로 평가토록 하여 전기공사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대

폭 확대했다.

또 전기공사의 경우 최저 낙찰 하한율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는 86.745%, 3억 미만의 공사는 87.745%로 현행보다 각각 2.8% ~ 3.8%씩 상향 조정됐다.

또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에서 실질 자본금 평가를 삭제했으며,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를 단순화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으로 평가토록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업계평균 비율보다 좋으면 최고 평점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를 폐지하고 최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

된다.

또한 무리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 증제도를 도입하고 100억 미만의 공사의 시공경험평가(A등급) 기준을 2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청,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242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2000년도 상반기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방안'을 확정, 전기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44개 업체에 총 242억원(업체당 평균 1억 7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의 이번 지원은 전국이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완화됐으며 지원대상 요건도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와 기계, 금속, 전자 등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기술개발 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최초로 1백% 순수 신용으로 대출되는 자금으로 지원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없이 사실상 우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담보나 기술평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수기술의 사업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간 금융기관 등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제조업 영위기업이나 창업초기기업 등 시장기능의 공백 영역에 대해 정부가 보완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청은 이번 지원결정 업체명단을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 연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올해 지원예산(300억원) 중 잔여분과 추가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 임시국회 상정 예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6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행정적 부담 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한전의 분할로 발전자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나 자산이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발전자회사가 별도의 조치없이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인 경우 약 39개 법률에 71개의 인·허가를 새로이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자회사가 직원에 대한 권리, 의무 등 고용계약을 승계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은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종전에 일반전기사업, 발전 사업 및 특정 전기사업으로 구분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별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전기사업 체계를 개편해 전기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전력시장의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화 등 기존 발전사업자는 한전과의 기존계약에 따라 전기공급을 하거나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것 중 선택권을 부여했고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뒤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었다.

한전이 그동안 담당해 오던 도서벽지 전화사업, 연구개발 지원, 다른 에너지지원사업 등 각종 공익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운영키로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내 '전기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심의 재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절전형 조명기기로 교체합시다.